

# 신규개발지역에 마을버스 도입

### 전주시, 맞춤형 교통서비스 구현 등 시민교통분야 4대 추진전략 제시

전주시가 올해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주시의 신규개발지역 교통사각지대에 마을버스를 도입하고, 시내버스 고정배차제와 운전원 1일2교대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시민불편사항 중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불법주정차 문제를 뿌리 뽑아 시민들에게 안전한 도로를 제공하고, 걷고 싶은 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시는 17일 열린 시민교통본부 신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시민교통 분야의 4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전주시의 이번 '사람과 생태가 공존하는 미래지향적 교통도시 구현'을 비전으로 한 교통 분야 4대 추진전략은 △삼의 길을 높이는 시민 수요 맞춤형 교통서비스 구현 △걷기 편하고 안전하며 사람 우선인 교통환경 조성 △생태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활성화 △고품질 고객만족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 등이다.

시민 수요 맞춤형 교통서비스 구현의 경우, 시는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운송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정배차제

전면 시행과 운전원 1일2교대제를 확대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모니터단 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전주시의 신도시 개발로 인한 교통사각지대에는 마을버스를 도입해 60년만의 시내버스 노선개편 이후 꾸준히 지속되는 도시 확장으로 인한 교통불모지 최소화를 위해 합심 계획을 세운다.

여기에, 지난해 3개월 동안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알뜰교통카드사업의 운영 방안을 개선해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버스타기 편리한 도시를 만든다. 동시에 버스 내부 전자노선 설치도 확대한다.

나아가, 시는 시민 행복을 위한 교통복지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들도 적극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셔틀버스와 장애인콜택시 등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증차하고 셔틀버스전용 승·하차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시민들의 편리한 특별교통수단 이용기반을 구축한다.

또, 공공형 택시인 모심택시를 확대 운영해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농촌마을 지역주민들의 발이

되어주고, 관광택시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전주를 찾는 국내·외 여행객에게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사람 우선인 교통환경 조성의 경우, 공공기관과 학교 등 유류 부설주차장 개방을 유도해 주차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별 불법주정차 발생 원인을 분석해 주정차 계획을 마련한다.

동시에, 인도·횡단보도·모퉁이도로·자전거도로·버스정류장 등에 대한 강력 단속을 꾸준히 실시해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빼앗긴 시민들의 보행권을 회복한다. 더불어, 시내버스 탑재형 이동식 CCTV 활용을 병행함으로써 통행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을 야기하는 압체주차를 퇴치해 시민들이 걸기 편한 안전한 보행환경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시는 또 지능형 교통체계 ITS구축으로 △교통신호 무선시스템 도입 △좌회전 감응 신호 운영 △돌발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CCTV △도로 소통상황 안내용 전광판(VMS) △주차 가능한 주차장안내(공영주차장) 등의 교통체계도 정비, 혁신도시와

에코시티 등 신도시 확장으로 인해 교통정체가 자주 발생하는 시내 주요도로의 정체해소에도 나설 예정이다.

끝으로, 시는 매매상사 전용 자동차 온라인 이전등록시스템 도입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로 편의를 도모하고, 무보험 운행차량에 대한 신속·정확한 수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또,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명에 건설기계감시원과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장애인·노약자·다문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용 상담창구 운영과 민원안내 전담직원 배치, 안내도우미 운영 등을 통해 시민이 만족하는 고품격 고객만족 차량등록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장병호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2019년 한해 시민수요 맞춤형 교통서비스 구현, 사람 우선인 교통환경 조성,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고객만족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등을 통해 시민이 존중받는 생태교통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 검찰, '약촌오거리' 부실수사

### 당시 15세 소년이 범인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

#### 과거사위 "검찰총장, 사법 피해자 등에 사과해야"

검찰이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강도 사건과 관련해 당시 부실 수사 등 검찰의 과오가 인정돼 무고한 수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했다.

또,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명에 건설기계감시원과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장애인·노약자·다문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용 상담창구 운영과 민원안내 전담직원 배치, 안내도우미 운영 등을 통해 시민이 만족하는 고품격 고객만족 차량등록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장병호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2019년 한해 시민수요 맞춤형 교통서비스 구현, 사람 우선인 교통환경 조성,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고객만족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등을 통해 시민이 존중받는 생태교통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과거사위에 따르면 최모씨는 경찰에 체포된 뒤 여관에 감금돼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검찰로 이첩된 뒤에도 두려움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범행을 거짓 자백했다고 전해졌다.

또한 검사는 최모씨가 경찰에서 자백했다더라도 기록상 확인되는 목격자 진술 등 택시강도 정황이 자백과 배치되는 점과 휴대폰 통화내역 및 피해자 운행 택시 타코미터 기록이 자백과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보강수사에 의문점을 해소하고 진범 여부를 검토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과거사위는 검찰이 진범 김모씨에 대한 신병 확보 필요성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판단해 불구속 지휘하는 등 부실한 수사지휘로 사건의 진상이 장기화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당시 진범 김모씨와 조력자 임모씨는 군산경찰서에 체포돼 자백을 받아 범행을 시인했으며 진술이 최모씨 수사 당시 확보한 부검 결과 등과 부합했던 점을 종합하면 김모씨를 구속수사하는게 맞다고 과거사위는 밝혔다.

과거사위는 검사가 이후에도 김씨에 대한 경찰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못하게 하거나 현장 압수수색영장을 부당히 기각하고 무의하거나 부적절한 지휘를 반복했으며 그 지휘 내용상 증거법적 오류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검찰이 2016년 진범 김모씨를 구속 기소할 당시 증거관계가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혐의없음' 처분해 최모씨가 무고함을 벗을 기회를 놓친 채 4년을 더 복역하고 만기출소했다는 과오도 인정했다.

이에 과거사위는 "검찰총장이 사법 피해자 최모씨와 그 가족,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유족에 대해 직접적이고 진정성 있는 방법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어 "법무부와 검찰은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 사건의 신속·효율적인 이행방안을 수립하고 철저히 시행할 것"과 "최씨에 대한 법원의 재심개시 결정에 대해 재항고한 경위 등 본건 재심 대응의 적정성을 소상히 파악할 것"을 요청했다.

진범 김모씨는 지난해 3월 지역 15년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강석훈 기자

## 음주 운전 사고

### 교통경찰 불구속 입건

교통경찰관이 음주 운전 사고를 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완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교통안전계 소속 A순경(27)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순경은 지난 16일 0시경 전주시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트럭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에서 A순경은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지만 오지 않아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순경을 직위해제하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벌할 예정이다. /강석훈 기자



김승수 전주시장이 17일 전주시 서학동 예술촌을 방문해 서학동 예술마을 뉴딜사업 주민협의회 위원들과 마을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

## 서학동 예술마을 도시재생 뉴딜 본격화

### 김승수 시장, 현장 점검

김승수 전주시장은 17일 서서학동과 동서학동 일원에서 서학동예술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화가와 도예가, 사진가 등이 동지를 틀면서 예술마을로 거듭난 서학동에 예술을 일원에서 추진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서학 예술마을 일원(153,555㎡)을 대상으로 오는 2021년까지 국비 10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72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이다.

김 시장은 이날 오후 서학동예술마을 일원을 직접 돌아보며 주요 사업 내용과 추진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시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행정 절차가 원활이 이행된 만큼, 올해는 '예술의 힘으로, 주민의 참여로, 새 숨을 쉬는 서학동 예술마을'을 비전으로 한 이 곳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노후주거지 정비 및 공공서비스 기반구축 △예술테마거리, 근린생활화 조성 및 창작체 거점지원사업 조성 등 지역자신 활용 매력적인 공간 창출 △마을정원화 사업 및 첨단안전마을 조성을 골자로 한 주민친화적 마을조성 △주민역량강화 및 거버넌스 구축 등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7년 12월 서학동예술마을이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일반근린형) 공

모에 선정된 이후 그간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주민의견을 반영한 활성화계획 수립 및 국토교통부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등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를 이행해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서학동에 예술마을을 포함한 전주 구도심 100만 평은 다른 어떤 도시도 갖지 못한 전주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며,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아시아 문화심장터 프로젝트의 성공은 시민들의 참여에 달려있는 만큼, 주민협의체 회원들께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주역이 돼 이웃들과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창구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송효철 기자

## 자전거 상습절도 20대 입건

상습적으로 자전거를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덕진경찰서는 절도로 A모씨(2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모씨는 지난 8일 오전 3시30분경 전주시 덕진동의 한 아파트에서 자전거를 훔치는 등 지난해 11월 초부터 최근까지 7회에 걸쳐 총 25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를 분석해 지난 16일 오전 0시 30분경 전주시 덕진구 B동 한 PC방에서 A모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A모씨는 "이동 수단으로 훔쳤다"고 진술했다. /강석훈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 김승수 전주시장, 시민햇빛발전소 공사현장 방문

김승수 전주시장이 기후변화와 에너지위기로부터 자유로운 전주를 위해 건립중인 전주시민햇빛발전소 현장을 찾아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김 시장은 17일 공사현장을 찾아 전주시민에너지 협동조합 관계자들과 함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효자배수지 약 2245㎡ 부지에 조성되는 전주시민햇빛발전소는 시가 에너지자립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

과 함께 수립한 지역에너지계획이자 에너지 자립운동인 '에너지디자인 3040'의 대표 사업으로, 시민들이 출자해 발전용량 100KW규모로 조성되는 태양광발전소이다.

김 시장은 이날 오후 서학동예술마을 일원을 직접 돌아보며 주요 사업 내용과 추진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와 관련, 전주시민햇빛발전소는 조합원 124명이 건립을 위해 1억5460만원을 모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 7일 착공에 들어갔으며, 오는 2월에 준공 예정이다.

시는 향후 시민들이 발전소 건립비용을 출자해 에너지생산에 참여하고 출자한 만큼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 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시민이 행복하

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 복원을 전제로 한 식량자립과 경제자립, 에너지자립, 문화자립 등이 필요하다"며, "시민들과 함께 어떻게 에너지를 절약할 것인지,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에너지를 어떻게 지역 생산 체제로 전환할지,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에너지를 저소득층과 함께 나눌 수 있을지 등에 대한 고민을 담아 수립한 지역에너지계획에 따라 에너지 자립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 차명분양에 뇌물... 한전 임직원들 무더기 적발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압력을 행사해 공사비를 수억 원가량 적게 책정해 공사대금을 후려치고, 차명으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은 한전전력 전, 현직 임직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전주지검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 한전 간부 A모씨(60)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B모씨(59)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어 뇌물공여 혐의로 살비업체 대표 C모씨(64)를 구속하고, 다른 한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한전 임직원들은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아내와 자녀 등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 30기를 분양받아 보유하고, 살비업체에 공사대금을 적게 책정해 수천만원을 할인받아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전 임직원들은 취업규칙과 행동강령에 따라 허가 없이 자신의 사

업을 운영할 수 없음에도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품을 제공받지 않았지만 태양광발전소를 분양 받아 부정을 저지른 한전 임직원 30명을 한전본부에 통보했다.

검찰은 이들이 감사 때는 부하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해당 업체에는 "발전소 부지에 응달이나 응덩이 있다"며 공사대금을 후려치는 등 업무에 대해 감정을 일삼았다고 설명했다.

신현성 전주지검 부장검사는 "혐의에 경중을 따져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 부정하게 태양광발전소를 분양 받았지만 금품을 수수하지 않은 직원들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법행 수법에 비춰 한전 임직원의 비위가 전국적으로 만연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석훈 기자

## 전북경찰 해안 고순대, 겨울철 산불 신속 진압

전북경찰청은 17일 서해안 고속도로 순찰대(대장 남궁화태)가 발 빠른 대처를 통해 대형 산불을 예방했다고 밝혔다.

서해안고속도로순찰대 이철희, 이명진 경위는 지난 16일 오후 7시경 노선순찰 중 서해안고속도로 광천톨게이트(TG)를 통과하다 광천영업소 뒤편 야산에서 불길기 번지는 것을 발견해 비치된 소화기로 초기진화에 성공했다.

당시 불길은 자칫 잘못하면 고속도로 영업소 건물에 불이 퍼져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었던 것을 사전에 예방한 것이다.

이후, 두 경찰관은 119에 신고해 잔불정리까지 완벽하게 처리했다.

남궁화태 서해안 고순대장은 "예리한 관찰력으로 초기 화재진화에 성공한 두 경찰관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경찰관의 본분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

겠다"며 서해안고속도로 이용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석훈 기자

## '집에 가려고' 차량 훔친 50대 입건

차량을 훔친 50대가 경찰에 30분 만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정차해 둔 차량을 몰래 타고 가 훔친 혐의(절도)로 A모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모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 27분경 익산시내 한 어린이집 앞에 자녀를 태우기 위해 정차해둔 차량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를 분석해 지난 16일 오후 7시 5분경 익산시 B동 인근 도로에서 A모씨를 검거했다.

조사결과 A모씨는 "집에 가려고 훔쳤다"고 진술했다. /강석훈 기자